

Global Market Report

'16/'17년도 미 연방예산 통해 본 미국 시장기회 분석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16년 미국 예산배정(세출) 개요 / 3

- 3 | 1. 예산배정 개요
- 5 | 2. 주요 분야별 분석
- 6 | 3. 부처별 주요 프로그램 현황

II. '17년 미국 대통령 예산(안) 개요 / 8

- 8 | 1. 대통령 예산(안) 개요
- 10 | 2. 주요 이슈분석
- 12 | 3. 부처별 예산 요청 현황
- 13 | 4. 의회반응 및 주요 쟁점사항

III. 시장기회 분석 / 14

- 14 | 1. 원유 수출재개
- 14 | 2. 신재생 에너지
- 15 | 3. 사이버 보안
- 15 | 4. 의료기기
- 16 | 5. 공공 인프라
- 16 | 6. 제약 · 의약품

IV. 시사점 및 전망 / 17

요 약

I. '16년 미국 확정예산

□ 개 요

- '15.12.18, 美 의회, 1조1천5백억 달러의 '16년 연방정부 세출법안 최종승인

□ 주요분야

- (친환경에너지)에너지부의 '16년 예산은 전년대비 9% 증가한 300억 달러로 에너지 관련 기술혁신,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에 예산의 1/3 투입
- (민간IT분야)국방부문을 제외한 IT 관련 예산은 510억 달러로 '14년 이후 연간 5.6% 이상 성장세
- (의약·보건)국립보건원(NIH), 질병관리센터(CDC), 식약청(FDA) 등 3대 의약 보건 기관의 총 예산은 500억 달러 이상
- (對테러안보)증가하는 국내 안보 수요에 맞춰 국경수비, 교통안전, 사이버보안 등에 총 494억 달러 편성
- (교통인프라)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총 750억 달러 배정

II. '17년 미국 대통령 예산(안)

□ 개 요

- '16.2.9, 전년대비 4.9% 증가한 약 4조1천억 달러의 '17년도 대통령 연방예산안 의회에 제출
 -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지만 대통령 예산서를 통해 차기년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 파악 가능

□ 주요 이슈

- (연구개발 투자)신제품, 신기술, 신산업 위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목표
- (공공인프라 투자)친환경 21세기형 교통 시스템 구축 계획과 더불어 공공인프라 건설 사업에 민간 자본 참여 확대 정책 추진
- (기후변화 대처)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적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 지속
- (IT 관련)연방 IT관련 정책 방향은 ①디지털 정부(e-Government), ②사이버 보안 강화, ③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

Ⅲ. 시장기회

- (원유수출재개)미국이 원유 수출을 재개할 경우, 관련 기계류 수요 및 자본 투자가 활발히 진행 기대
- (신재생에너지)미국 친환경 에너지 산업 시장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속에 태양광 모듈 등 국내 관련 제품의 수출에 호재
- (사이버보안)연방정부의 민간 공급 사이버 보안 제품 수요가 '20년까지 110억 달러(연평균 5.2%성장)까지 증가
- (의료기기)우리나라는 의료정보시스템(PACS) 보급률 세계 1위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 보유하고 있어 U-health 등 IT 융복합 의료 기기 분야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모색
- (공공인프라)친환경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등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인프라사업에 국내기업의 적극적 진출 시도가 필요
- (제약·의약품)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의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기술 아웃소싱, 복제약 시장 확대 등의 기회 발생

I '16년 미국 예산배정(세출) 개요

1 예산배정 개요

- (경과) '15.12.18., 의회는 1조1천5백억 달러의 '16년 연방정부 세출 법안을 최종 승인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서명을 통해 「Consolidation Appropriation Act, 2016」 발효
 - 하원 (찬성 316표 對 반대 113표), 상원 (찬성 65표 對 반대 33표)은 임시예산
 시한 (12.22) 내에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연방정부 부분업무정지(셧다운) 사태 모면
 - 본 법안은 양원의 세출위원회가 승인한 기존 세출법안과 함께 세제혜택 연장
 법안이 합쳐진 통합 세출법안 (Omnibus Spending Bill*)으로 처리됨
- * 통합세출법안(Omnibus Spending Bill) : 세출 소위원회가 배정한 12개 분야 상세
 세출항목을 개별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패키지 형태인 단일 법안으로 표결처리 하는 것을 의미함

<'16년 예산안 처리 경과 개요>

- ▶ ('15.2.2) 오바마 행정부 예산제안서 對의회 송부
- ▶ ('15.5.5) 상하원 2016년 예산결의안 (Budget Resolution) 채택
- ▶ ('15.10.30) Bipartisan Budget Act 통과(국가부채 한도 증액 및 2년간 예산규모에 합의)
- ▶ ('15.12.18) 2016년 연방예산법안 양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원유수출 규제 철폐	본 예산처리의 부속합의를 통해 40년 만에 자국산 원유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
신재생에너지 세제 혜택 연장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 5년 추가 연장 민주당은 원유수출 규제 철폐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화당을 설득하여 관철시킴
제조기업 세제혜택 연장 또는 영구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무기한 연장,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세금공제 혜택 연기
국제통화기금 (IMF) 구조개혁	IMF 구조개혁을 승인하는 조항 포함 전체 자본금 규모를 확충하고, 출자 지분을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상당 부분을 이전하는 내용

□ 예산 배정 현황

- (전체) '16년 재량지출예산(Discretionary Appropriations)은 1조1천5백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약 500억 달러) 증가 (대통령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
- (국방) 전체 예산의 50% (5,730억 달러)를 차지하는 국방지출 증가율은 평균에 못 미치는 3.3%에 그쳤으나, 군 시설확충 및 보훈처 관련 예산은 11% 증가
- (과학) 항공우주 및 기타 과학 프로그램을 위해 268억 배정 (전년 대비 5.2% 증액)
 - NASA 예산 193억 달러 (↑ 7%) / 국립과학재단(NSF) 예산 75억 달러 등
- (에너지) 관련 예산은 총 370억 달러로 전년대비 29억 달러 (8.7%) 증액
 - 핵에너지 분야에 186억 달러 /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연구에 20억 달러 투자
- (노동, 보건, 교육) 관련 총 1,637억 달러 배정 (전년 대비 1.7% 증액)
 - 특히, 공중보건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에 총 480억 달러 배정
 - * 국립보건원에 320억 달러, 질병통제관리센터(CDC)에 72억 달러 배정

<소위원회별 연방 가용예산 배정 현황 (Budget Authority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소위원회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전체대비 (%)	금액	전체대비 (%)	
Agriculture	20,691	1.9	21,878	1.9	5.7
Commerce, Justice, Science	50,103	4.6	55,722	4.8	11.2
Defense	554,306	50.4	572,774	49.8	3.3
Energy and Water	34,202	3.1	37,185	3.2	8.7
Financial Services	21,820	2.0	23,235	2.0	6.5
Homeland Security	46,321	4.2	47,823	4.2	3.2
Interior and Environment	30,416	2.8	32,859	2.9	8.0
Labor, HHS, Education	160,989	14.6	163,650	14.2	1.7
Legislative Branch	4,300	0.4	4,363	0.4	1.5
Military Construction and VA	72,029	6.5	79,869	6.9	10.9
State, Foreign Operation	51,791	4.7	52,675	4.6	1.7
Transportation, HUD	53,770	4.9	57,601	5.0	7.1
합계	1,100,738		1,149,639		4.4

자료원 : 국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상하원세출위원회

2 | 주요 분야별 분석

- ①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부의 '16년 예산은 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 특히 에너지 관련 기술혁신, 국내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에 예산의 1/3 투입
 -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27억 달러와 R&D 투자에 53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에 주력
 - * 전기자동차 관련 4.4억 달러(전년대비 ↑59%) / 태양광에너지 3.4억 달러 (↑45%) / 친환경 제조업 혁신 4억 달러(↑104%) 투입
- ② **(민간 IT분야)** 국방부문을 제외한 연방 전체 IT관련 예산은 510억 달러로 '14년 이후에 연간 5.6% 이상 성장세
 - 전체 클라우드 IT관련 예산은 27억 달러로 '14년 이후 240%이상 급증. 사이버보안 관련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23% 증액된 4.6억 달러 예산 배정.
- ③ **(의약·보건)** 국립보건원(NIH), 질병관리센터(CDC), 식약청(FDA) 등 3대 의약 보건 기관의 총 예산은 500억 달러 이상
 - 「New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에 2.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여 유전자 분석, IT의료 등이 접목된 예방 정밀의학 연구에 집중
 - 암 퇴치, 정신질환, 치매 연구 등에 전년 대비 2억 달러 증액 예산 편성. 에볼라 등 전염성 질환 연구에도 3억 달러 추가 예산 배정
- ④ **(對테러 안보)** 증가하는 국내 안보 수요에 맞춰 국경수비, 교통안전, 사이버보안 등에 총 494억 달러 편성
 - 국경수비 및 이민통제를 위해 190억 달러 배정. 멕시코 국경 인프라 (감시타워, 보안펜스,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4.5억 달러 예산 배정
 - 국가 인프라와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NPPD에 30억 달러 배정 (↑8.4%). 이중 국가 기간망 사이버보안 유지를 위해 8.2억 달러 예산 배정
- ⑤ **(교통 인프라)**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총 750억 달러 배정
 - 연방고속도로청의 고속도로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해 500억 달러(↑25%), 연방철도청의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50억 달러(↑203%) 등 배정

3 부처별 주요 프로그램 현황

<부처별 주요 프로그램 예산 (2016년)>

[단위 : 백만 달러]

부처	프로그램명	예산*	전년대비 증가	내용
국방부	F-35 Joint Strike Fighter	11,000	28%	공·해군 F-35 전투기 구매
	P-8A Poseidon aircraft	3,400	43%	해군 작전용 전투기 구매
	C-130J Hercules aircraft	2,600	64%	공군용 전투기 구매
상무부	Operations, Research, and Facilities (NOAA)	3,543	7%	해양기후청(NOAA), 남극 해양기후 탐사
	Industrial Technology Services (NIST)	306	122%	국립과학재단, 제조업 기술 연구개발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NIST)	758	11%	국립과학재단, 사이버보안 등 연구개발
	Procurement, Acquisition and Construction (NOAA)	2,498	2%	해양기후청(NOAA), 기후조사 등 설비구매
에너지부	Vehicle Technologies	444	59%	전기자동차 개발 지원
	Solar Energy	336	45%	태양광 기술 개발
	Advanced Manufacturing	404	102%	친환경에너지혁신센터 지원
환경보호청	Science and Technology	769	5%	공기, 수질 개선 기술개발
보건복지부	FDA	2,744	5%	신약개발 증진
	CDC-Zoonotic Disease Research	645	83%	전염성 질환치료제 개발
국토안보부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IT security (NPPD)	1,312	0.6%	인프라 보호를 위한 IT기반 기술
	National Cybersecurity & Protection System	464	23%	사이버보안기술개발 운용
	Biometric identity services(NPPD)	227	25%	생체인식 기술개발
	Border security fencing,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projects (CBP)	373	31%	국경 보안 인프라 및 기술 확충
내무부	US Geological Service	1,195	4%	기후변화대처 및 환경보건증진
노동부	IT Modernization	120	677%	부처내 IT 현대화
교통부	PHMSA	289	18%	송유관 환경안전도 제고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51,307	25%	고속도로 인프라 재건/정비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5,018	203%	철도서비스 개선사업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18,399	67%	대중교통 시설 확충
보건부	Information Technology	4,123	6%	건강기록 전자관리 시스템
	Medical and Prosthetic Research	622	6%	바이오의약, 재활의학 개발투자

자료원 : 상하원세출위원회 / Bloomberg Gov. 분석

* 부처별 예산신청 기준

<부처별 신규 프로그램 (2016년)>

[단위 : 백만 달러]

부처	예산배정	내용
아팔란치아 지역 위원회	50	아팔란치아 지역의 경제 다양성, 고용창출, 고용교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상무부	37	극지방 탐사관련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
	80	극지방 탐사용 특수 선박 건설
국방부	24	무인 정찰기 추가 구매 및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
	27	대 테러 작전과 인력양성을 위한 세인트루이스 지역 신규 시설 디자인 설계
	30	국방제품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부	195	국방전략용 핵에너지 재활용 프로그램
	14	친환경 에너지 제조혁신 센터(CEMI) 설립운영
보건복지부	1	결핵형피부병(Lupus) 임상실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	New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운영자금 : 유전자 분석, IT의료 등이 접목된 예방진단 의학
국토안보부	19	국경 감시타워 설치운영
	10	대테러 관련 전략 현대화 추진을 위한 통합 관리 프로그램 운영
	10	대테러 모바일 감시 시스템
	215	국토안보부 청사 증설
	15	주요 교통시설 승객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기술 개발운영
	11	TSA PreCheck Application Expansion initiative
	6	해안수비대 쇄빙선 신규 구매
	84	대통령 경호실 운영 시스템 강화
	12	사이버범죄 조사 강화를 위한 첨단 컴퓨터 범죄 수사 기술 개발 운영
	100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토안보부 자체 IT 시스템 보호 강화
	50	주 및 지방정부의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 시스템 강화
내무부	93	국립공원 관리 강화 프로그램
법무부	180	FBI 건물 신축
노동부	24	IT 인프라 시설 보수/신축
	5	내부 인트라넷 신설
국립과학재단	35	흑인 및 소수계 기초기술과학 연구 활동 지원
국무부	25	현대판 노예 근절 노력
교통부	7	교통, 철도 안정성 제고 연구 활동
	8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책
	5	교통부 재정관리 효율화 프로그램

자료원 : 상하원세출위원회 / Bloomberg Gov. 분석

II '17년 미국 대통령 예산(안) 개요

1 대통령 예산(안) 개요

- (경과)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처(OMB : Office of Budget Management)는 2월9일, 오바마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연방예산안('17년도)을 의회에 제출
 - 미국의 예산편성은 입법부의 고유권한(법률 형식으로 결정)으로서 행정부가 제출하는 대통령 예산안은 의회 예산심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 하지만, 대통령 예산서는 차기년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전체예산) '17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총액은 약 4조1천억 달러로 전년 확정 예산 대비 2천억 달러 (↑4.9%) 확대 편성 요청
 - '17년도 예상 세입과 세출은 전년 대비 각각 3,080억(9.2%), 1,960억(4.9%) 달러가 증가하였고, 재정적자는 GDP의 2.6% 수준인 5,030억 달러로 의회의 추정치인 5,610억 달러(GDP의 2.9%)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
 - 의료, 이민, 세계개혁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2조9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감소를 통해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3%이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대통령 예산(안) 재정 추이 및 전망 (2014-2020)>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입 (GDP대비)	3,021 (17.5%)	3,250 (18.3%)	3,336 (18.1%)	3,644 (18.9%)	3,899 (19.4%)	4,095 (19.5%)	4,346 (19.8%)
세출 (GDP대비)	3,506 (20.3%)	3,688 (20.7%)	3,951 (21.4%)	4,147 (21.5%)	4,352 (21.6%)	4,644 (22.1%)	4,880 (22.3%)
재정적자 (GDP대비)	485 (2.8%)	438 (2.5%)	616 (3.3%)	503 (2.6%)	454 (2.3%)	549 (2.6%)	534 (2.4%)
GDP	17,244	17,803	18,472	19,303	20,130	21,013	21,921

자료원 : 예산관리처(OMB : Office of Budget Management)

□ (분야별 지출) '17년 대통령예산안에서 정부부처의 재량지출 총액은 1조 2천억 달러 (국방: 6,080억 달러 / 비국방 : 6,250억 달러)이며 사회보장, 채무상환 등에 소요되는 의무지출은 2조 6천억 달러에 달함

*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국방부 포함 각 부처가 재량으로 지출하는 예산임. 복지지출, 국가 채무상환 등에 쓰이는 고정 비용인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과 구분됨

○ 국방과 비국방 분야의 '17년도 재량지출은 '15.10월에 통과된 「Bipartisan Budget Act of 2015*」의 상한선(300억 달러) 이하인 총 100억 달러 증액 요청

* '16.10.28, 상·하원은 예산안 및 부채한도 합의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2년간 재량지출 인상 상한선을 '16년에 500억 달러, '17년에 300억 달러로 제한. 또한 부채한도를 '17.3.16일까지 유예하도록 결정

<분야별 예산 추이 (2014-2020)>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재량지출	1,121	1,165	1,223	1,233	1,219	1,226	1,236
국방	596	583	595	608	589	591	597
비국방	525	581	627	625	629	635	639
총 의무지출	2,156	2,301	2,487	2,606	2,741	2,950	3,112
사회보장	845	882	924	967	1,025	1,089	1,156
메디케어*	505	540	589	598	601	656	695
메디케이드**	301	350	367	386	405	426	450
기타	504	529	607	656	710	779	810
이자 및 조정항목		223	242	309	393	468	532
지출 총계	3,506	3,688	3,951	4,147	4,352	4,644	4,880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건강 보험 프로그램) / **메디케이드(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 대상)

□ 예산(안)의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단기적으로 향후 3년 간 실질 GDP 성장은 연간 2.5%, 이후 '26년까지는 2.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생산 인구 감소가 장기적 경제 성장에 부정적 작용
- (고용) 실업률은 '17년까지 4.5%로 하락, 이후 '23년까지 4.9%로 안정세
- (이자율) 低인플레이션 기조 속에 미국 단기채권(90일 만기) 이자율은 '20년까지 3.3%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금융위기 직전 5%대 상회)
- (물가상승률) 유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지속되고 있는 낮은 물가상승률(現 15%)은 '18년까지 2.0%, 이후 2.3%로 상승하여 정상수준으로 진입 예상

2 | 주요 이슈 분석

1] (연구개발 투자) 신제품, 신기술, 신산업 위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목표

* 연방 전체 R&D 지원 예산으로 총 1,520억 달러 배정 요청(전년대비 4%↑)

<주요 R&D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청정 에너지	첨단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혁신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총 77억 달러 예산 요청
수자원 기술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해수담수화, 지능형 수자원관리, 수자원 보호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3억 달러 예산배정
기초과학	3대 기초과학 연구 부처인 에너지부 과학처(57억 달러), 국립과학재단(80억 달러), 국립기술표준연구소(8억 달러) 예산배정
첨단제조업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 내 신성장동력 산업관련 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국방부 등에 20억 달러 R&D 자금지원
의료연구	국립보건원의 바이오의학 연구에 331억 달러 지원 - 암 퇴치 「Cancer Moonshot Initiative」 등을 위해 10억 달러 투자 등
초고성능 컴퓨터	'15년에 개시된 「National Strategic Computing Initiative*」에 3억 달러 예산배정. 슈퍼컴퓨터, 알고리즘,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주력
민간 R&D 지원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 실험(R&E)관련 공제 확대 및 간편화 추진 (기존 14%에서 18%까지 세금 공제 확대)

* 오바마대통령은 본 행정명령을 통해 고성능컴퓨터 개발 및 상용화 추진

2] (공공인프라 투자) 친환경 21세기형 교통 시스템 구축 계획과 더불어 공공인프라 건설 사업에 민간 자본 참여 확대 정책 추진

<21세기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교통망 확대	대중교통 시스템, 고속도로 신축, 고속철 건설 등 교통편의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 200억 달러 투자
주/지방 정부 지원	주/지방정부가 교통 인프라 구축시 청정 스마트 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 (연간예산 100억 달러)
친환경 자동차/항공기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 및 저탄소배출 항공기 등 개발, 관련 인프라 건설 지원에 20억 달러 투자
교통시설 안전강화	도로/항만/공항 등 교통인프라의 시설안전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1억 달러 예산배정

- ③ (기후변화 대처)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적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 지속
 - 파리기후협약 시 합의한 향후 5년간 친환경에너지 연구 투자 2배 확대를 위해 현행 64억 달러('16년)에서 '21년까지 128억 달러 확대 계획
 - * 에너지부를 통해 연방 전체 친환경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의 76%를 집행
 -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총 90억 달러를 지원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등

- ④ (IT 관련) 연방 IT관련 정책 방향은 ①디지털 정부(e-Government), ②사이버 보안 강화, ③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
 - '17년 연방 전체 IT관련 예산은 890억 달러로 전년대비 1.3% 증가에 그치나, 사이버 보안 예산은 전년대비 35%가 급증한 190억 달러 편성

<연방 IT관련 예산>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국방 분야 IT	36,727	37,987	38,551
비국방 분야 IT	49,965	50,726	51,300
전체	86,682	88,712	89,850

-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 방침에 따라 31억 달러 규모의 「IT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인력양성에 투자할 계획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프로그램>

단위 : 백만 달러

프로그램	내용	예산
국방부의 Network Defense	국방 분야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및 인력개발	6,700
IT Modernization Fund	기존 IT시스템의 현대화 및 사이버보안 기능 탑재	3,100
CDM*, EINSTEIN**, NCCIC***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사업(3건)	983
Innovative Cybersecurity Technologies	민간분야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지원	492

* CDM (Continuous Diagnostics and Mitigation program)

** EINSTEIN : U.S. Computer Emergency Readiness Team이 개발한 망감시 프로그램

*** NCCIC (National Cybersecurity &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3 부처별 예산 요청 현황

부처	예산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감	주요 내용
노동부	12,798	5.1%	고용교육(98억) 등
보훈부	75,149	5.0%	보훈지원서비스(1,040억), 보훈병원(690억)
재무부	13,142	4.0%	연방세무서비스(120억), 사이버보안관련(2.5억)
상무부	9,745	4.0%	국가기후대기국(58억), 센서스국(16억), 국제무역국(ITA)(5.2억) 등 배정
에너지부	30,240	2.0%	재생에너지개발(29억), 국가핵안보국(128억)
교육부	69,388	1.6%	컴퓨터교육(41억)에 40% 증액, 커뮤니티칼리지지원(5억) 등
국무부	28,667	0.5%	국제안보지원청(127억), USAID(69억) 등
주택건설부	37,983	0.5%	공공주택건설(280억), 지역설계 및 개발(68억)
국방부	582,702	0.4%	기술개발(718억), 항공기/군함 구매(1,121억) 등
내무부	13,239	0.3%	국가지리연구개발(12억), 공원관리청(31억)
국토안보부	47,279	-1.5%	자연재해복구펀드(67억), 국경수비대(120억)
농무부	24,240	-5.7%	농가 보조금 및 보험 관리(180억)
보건복지부	78,276	-7.9%	국립보건원(303억), 질병통제센터(60억), 식약청(2.7억), 중독/정신질환 서비스국(3.5억)
교통부	11,984	-16.2%	연방항공국(130억), 파이프라인정비(2.7억)
NASA	18,263	-5.3%	우주탐사운영(470억), 우주기술연구(7억)
환경보호청	8,266	1.6%	환경과학기술개발(7.5억), 환경프로그램(28억)

자료원 :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of Budget)

4 | **의회반응 및 주요쟁점 사항**

- **(의회반응)** 오바마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레임덕 시즌에 제출된 대통령 예산안은 발표 즉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반발에 직면함
 -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은 “비효율적 정부 확대를 꾀하는 전형적인 진보의 매뉴얼일 뿐”이라고 꼬집었으며, 상·하원 모두 본 예산안은 의회 도착과 동시에 사망할 것(Dead on Arrival)임을 시사
 - 마이클 엔지 상원 예산위원장은 본 예산안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톰 프라이스 하원 예산위원장도 예산안을 주도한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의회 예산공청회에 초청도 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반대 표명
- **(주요쟁점)** 본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항은 향후 10년간 2조6천억 달러에 달하는 증세 계획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됨
 -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9,550억 달러), 대기업 세제개편 (8,500억 달러), 해외소득세율 인상(3,500억 달러), 월가 금융 거래세 (3.8%)의 도입 (1,110억 달러) 등을 통해 세수증대 방안 제시
 - 또한, 석유기업에게 배럴당 10.25 달러의 특별세를 부과하여 향후 10년간 발생할 세수 3,190억 달러를 친환경 인프라 건설에 전용할 계획
 - * 동 조치로 1갤런 당 25센트의 일반소비자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 **향후예산일정**

일 정	기 한	내 용
의회예산청문회	3~4월 중	상하원 예산위원회 주재 공청회에서 부처별 예산안 소명
의회 예산결의안	4월 15일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세입/세출안 심의결정
세출법안 작성	4~8월 중	상하원 소위원회별 세출 심의
세출법 통과	9월 30일	상하원 세출법안 통과 처리
회기연도 시작	10월 1일	기한 내 세출법안 미 통과시 임시지출승인 가능. 이마저도 협의가 안 될 경우 연방정부 섰다운 사태 발생

* 금년 11월에 하원 전원과 상원 1/3을 선출하는 의회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세출법은 기한 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Ⅲ

시장기회 분석

1. 원유 수출 재개

- (현황) 1차 오일쇼크 후인 1975년부터 지속된 미국의 원유수출금지 조치를 해제
 - 국제적 저유가 추세 속에 미국 내 원유생산이 정체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금수조치 해제가 당장 대규모 수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미국이 원유 수출을 재개할 경우, 관련 기계류 수요 및 자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Aspen Institute 보고서 인용)
 - '20년까지 원유개발과 탐사를 위한 투자가 약 70억 달러 상승할 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건설 및 제조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단,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해양플랜트, 건설, 조선 등 철강관련 주요 산업에 끼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

2. 신재생에너지

- (현황) 태양광, 풍력에너지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5년간 추가 연장
 - '16년에 일몰 예정이던 상업용과 가정용 태양광 설비에 대한 30%의 세액공제 연장
 - 풍력에너지 전력 생산 세액공제는 '17년에 현행 수준의 80%의 세액공제 가능
 - 세제혜택 연장효과로 '21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관련 지출은 각각 500억 달러, 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 * 세제혜택 만료 시 대비 태양광 172%, 풍력 240% 이상 추가 성장 기대
- (시사점) 미국 친환경 에너지 산업 시장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속에 태양광 모듈 등 국내 관련 제품의 수출에 호재
 - 미국 시장에선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반덤핑 관세(최대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 우위 보유
 - 풍력설비에서 미국산 비중이 낮은 발전기 내부부품 (베어링, 플랜지 등)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들은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맞는 제품 수출에 주목할 필요

3. 사이버 보안

- (현황) 미국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은 '20년까지 연평균 6.2% 성장하여 누적 655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 (Market Research Media 인용)
 - '16년 주요 사이버보안 관련 연방 프로그램으로는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5.8억 달러)과 FBI 민간사이버캠퍼스 건설(2.2억 달러), 법무부의 사이버 공격수사(5.2억 달러), 민관 기술개발 협력(1.5억 달러) 등
- (시사점) 정부조달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Deltek社는 연방정부의 민간 공급 사이버 보안 제품 수요가 '20년까지 110억 달러(연평균 5.2%성장)에 달할 것으로 전망
 - IoT 융합 등 인터넷 신산업 분야, 국가 기간산업 인프라 보안, 5G 기술 등 미래 통신 보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산업육성, 인력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
 - 단, 미국은 사이버보안 기술의 자주권 확보 측면에서 제3국에 대한 과도한 기술 의존을 지양하는 바, 현지화 또는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 모색 필요

4. 의료기기

- (현황) 의료기기 특별소비세 유예와 연방정부의 의료정보 디지털화 추진
 - '13년부터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에 부과되던 2.3%의 특별 소비세가 '17년까지 2년 동안 유예됨 (50억 달러 이상의 감세 효과 발생)
 - '17년부터 공공 병원의 영상 진단장비의 디지털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기관의 비용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추진
 - 보건부는 건강기록 전자관리 시스템을 위해 41억 달러 예산 책정
- (시사점) 우리나라는 의료정보시스템(PACS) 보급률 세계 1위로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 보유하고 있어 U-health 등 IT 융복합 의료기기 분야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모색 필요

5. 공공 인프라

- (현황) 미국 내 낙후된 공공 인프라 시설 재건을 위해서 '30년까지 총 8조2천 억 달러 (연평균 4,5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 특히, 도로교통 부문의 인프라 투자는 '16년 523억 달러(확정예산 기준)에서 '17년 730억 달러(대통령 예산안 기준)로 39% 이상 대폭 확대 편성
 - * 21세기형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에 180억 배정 / 철도 현대화사업에 전년대비 67% 증액
 - 오바마행정부는 '14년 「Build America Investment Initiative」 를 통해 국내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해외 민간 사업자 및 투자가의 참여를 장려할 계획
- (시사점) 공공 인프라 사업은 현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기 유력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핵심공약으로 향후 비약적인 시장 확대 전망
 - 국내기업들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서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5% 수준('14년말 기준)으로 저조한 상황
 - 미국시장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등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인프라사업에 국내기업의 적극적 진출 시도가 필요

6. 제약 · 의약품

- (현황) 제약 산업은 7,90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400만개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가 집중
 - '16, '17년 예산을 통해, 암 퇴치를 위한 「Cancer Moonshot Initiative」 , 정밀의학 육성을 위한 「New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에 총 12억 달러 이상 투자
- (시사점) '14년 본격 시행된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의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기술 아웃소싱, 복제약 시장 확대 등의 기회 발생
 - 국내 제약사들은 글로벌 마케팅, 라이선싱, M&A, R&D 기획 등을 통해 국내 개발·개량신약의 미국 시장 진출 활성화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임

IV

시사점 및 전망

-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예산안인 '17년도 대통령예산안은 의료분야 R&D 투자 확대, 친환경 인프라 환경 조성, 사이버보안 및 IT 시스템 현대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하지만, 본 예산안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의회 환경 하에서 실제 예산 배정에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특히, 현 정부가 세원 마련 대책으로 제안한 버핏세 도입, 대기업 해외 수입 과세, 월가 금융거래세 및 석유 특별세 도입 등은 의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
- '16년 11월 8일에 동시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가 향후 의회의 예산편성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예정
 - 7월말 양당의 대통령 후보 결정 이후에 후보자의 정치적 스탠스, 경제관련 공약에 따른 '17년 예산의 향배에 주목할 필요
 - 하반기부터는 상하원 모두 사실상 선거 체제에 돌입하게 되어 예산 및 세출관련 법안 통과에 있어 의회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16년 확정예산, '17년 대통령예산안에서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사이버보안, 대대적 공공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기업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됨
 - 특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생태계 구현을 위한 대대적 투자가 기대되는 바, 관련 기업의 사업진출 기회 모색 필요
 -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미국 내 낙후된 공공인프라 재건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기존까지 개발도상국 위주 프로젝트 사업에 치중하던 국내기업들도 선진 고부가가치 미국시장 진출 기회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음



작성자

- ◆ 워싱턴 무역관 이정민
- ◆ 구미팀 권오승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6-011

'16/'17년도 미 연방예산 통해 본
미국 시장기회 분석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6년 3월 2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7219-05-7 (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16/'17년도 미 연방예산 통해 본
미국 시장기회 분석
